

광주 남구·광산구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도입 주목

시, 선거구 획정안 의결...인구수 반영 비율 60%·동수 40% 적용
소수정당 진입장벽 낮춰...정치적 쟁점 속 시의회 통과 여부 관심

2026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획정안의 핵심은 인구 편차가 커진 선거구의 의원 정수를 조정해 남구와 광산구에 각각 4인 선거구"를 도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거대 정당의 '선거구 쪼개기' 썰수가 이번에도 재현될지 모른다는 우려 섞인 시선이 겹치지 않고 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시는 획정위 회의를 열고 2025년 10월 31일 기준 인구와 행정동 통계를 기준으로 한 광주기초 구의원 정수 배분과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획정은 인구수 반영 비율 60%와 동수(행정동 개수) 반영 비율 40%를 적용해 산출했다.

이에 따른 자치구별 총 정수는 동구 7명, 서구 13명, 남구 11명, 북구 20명, 광산구 17명 등 총 68명(지역구 59명·비례대표 9명)으로 현행 정수를 유지했다.

그러나 세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서는 변화가 발생했다. 인구 증감에 따라 남구와 광산구의 선거구 지형이 바뀐 것이다.

우선 남구의 경우 기존 3명씩 선출하던 선거구 체제에 변동이 생겼다. 봉선2동과 진월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을 아우르는 '남구 나선거구'는 인구가 9만 9505명에 달해 의원 정수가 기존 3명

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양림동과 방림1·2동, 사직동, 백운1·2동이 속한 '남구 다선거구'는 인구 4만 4107명에 그쳐 의원 정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광산구 역시 신도시 인구 쏠림 현상이 반영됐다.

수완동과 하남동, 임곡동이 포함된 '광산 마선거구'는 인구 10만 1951명을 기록, 의원 정수가 3명에서 4명으로 확대됐다.

이에 반해 송정1·2동과 도산동, 어룡동 등이 속한 '광산 가선거구'는 인구 7만 6524명으로 기존 4명이던 의원 정수가 3명으로 감소했다.

획정위의 이번 결정은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취지를 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문제는 이 획정안이 원안대로 광주시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다. 과거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획정위의 결정은 번번이 '정치적 쟁점'에 의해 난도질당해왔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광주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정치 개혁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두 개로 쪼개는 방식을 고수해왔다.

4명을 뽑는 선거구에서는 3~4위 득표자도 당선권에 들어 소수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지만, 이를 2인 선거구로 나누면 거대 양당이 의석을 독식하기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다양성 확보'라는 지

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고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는 구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광주시 획정위는 4인 선거구 신설을 포함한 혁신적인 안을 제출했으나, 광주시의회는 이를 본회의 상정 직전에 수정해 2인 선거구로 되돌려버렸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의원들의 '오더(지시)'를 받은 시의원들이 거수기 노릇을 자처하며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을 자행했다고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이번에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남구 나선거구와 광산 마선거구는 각각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라는 것이라는 점에 서다.

인구 상향선을 초과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4인 선거구를 분할하려는 시도가 물밑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대선이나 총선을 앞둔 시점이 아닌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지역 위원장인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시의원들이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의 의중을 거스르고 획정위 원안을 사수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구조다.

지역 한 정가 관계자는 "획정위가 아무리 인구비례 원칙과 정치적 다양성을 고려해 이상적인 안을 내놓아도 최종 결정권자인 시의회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며 "사실상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조직 관리에 유리한 쪽으로 선거구를 재단하려 든다면 획정위의 논의는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획정안을 토대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하고 내년 2~4월 사이 관련 조례 개정안이 심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최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서울푸드 인 방콕 2025' 행사장에 마련된 전남 농수산물관에서 현지 바이어들이 수출 상담을 받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 농수산물, 태국서 150만 달러 수출 성과

‘서울푸드 인 방콕’ 참가...올 수출액 1300만 달러...35.7%↑

전남도가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서울푸드 인 방콕 2025'에 참가해 150만 달러 규모의 농수산물 품 수출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태국은 베트남에 이어 전남 농수산물 수출 2위국으로, 꾸준한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올해 10월까지 전남의 태국 농수산물 수출액은 1300만 달러로 전년보다 35.7% 증가했다. '서울푸드 인 방콕'은 국내 최대 식품전시회인 '서울푸드'의 해외 개최 행사로, 동남아-아세안 지역 300여 사 바이어가 참여하는 B2B(기업 간 거래) 중심 식품 전문 전시회다.

이번 박람회에는 11개 기업이 참여해 전남 농수

산식품관을 운영했으며, 총 327건의 수출상담과 824만 달러의 상담실적, 150만 달러의 수출협약을 거뒀다. 특히 두부면과 다시마면 생산 기업은 바이어와 50만달러, 조미김과 멸치 등도 각각 50만달러 수출 협약을 맺으며 큰 인기를 보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동남아 지역에서 케이(K)-푸드 인기가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태국은 전남 기업이 아세안 전역으로 판로를 확대하는데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남 농수산물품이 동남아를 포함한 다양한 해외 시장에서 수출 판로를 넓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방정가 라운지

“농업 전산화에 고령 농민들 소외 없어야”

신승철 전남도의원 지적

전남도의회가 빠르게 추진되는 농업 전산화 흐름 속에서 고령 농민 소외를 우려했다.

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안 심사에서 신승철(민주·영암1) 도의원은 "디지털 시대에 고령 농민들이 소외없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업경영체등록과 직불금 조회 및 계산, 경영체와 영농 사실 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애그릭스(Agrix)' 시스템이 수요자 참여형 '농업 e지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사용이 의

숙하지 않은 고령 농민들의 접근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게 신 의원 설명이다.

신 의원은 "시스템의 고도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보취약계층인 고령 농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순 기기 설치를 넘어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남도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조작 지원 요원을 배치해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무상교육·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광주시 보육정책, 대통령 표창

광주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총력 성과

광주시가 보육 분야 최고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다.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무상보육 실현과 보육 교직원들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등 선도적인 보육 정책을 펼친 공로를 인정 받았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정부 포상' 심사에서 지자체 부문 대통령 표창 수상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심사는 정책 기여도와 특수 정책 개발, 안전 관리 성과 등 보육 행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됐다.

시는 그동안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실제 지난 2023년부터 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필요 경비를 지원한 데 이어, 내년 7월부터는 3세 아동까지 월 5만원을 지원하는 등 무상보육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특히 외국인 아동에게도 차별 없는 지원을 적용해 포용적 복지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새 없는 돌봄망 구축도 성과를 냈다. 긴급아 이돌봄센터 2곳을 운영해 급한 일이 생긴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줬으며, 올해 처음 도입한 영유아 발달 상담 사업은 발달 지연 아동들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기저재비를 지원해 공공보육 이용률을 50%까지 끌어올렸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유보통합)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교육청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메뉴얼을 제작하는 등 현장 혼란을 줄이는 데 주력했다.

보육 품질의 핵심인 교직원들의 근무 환경도 대폭 개선됐다.

처우개선수당 지급 기준을 완화해 2500여 명이 추가 혜택을 받도록 했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를 국공립 수준으로 현실화했다. 아울러 비담임 교사를 기존 33명에서 100명으로 3배 이상 늘려 보육 공백을 최소화했다.

이 밖에도 급식비 지원 단가를 내년 326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식재료 공동 구매를 추진해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반을 다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대통령 표창은 저출생 위기 속에서도 보육 현장을 묵묵히 지켜준 교직원들의 헌신과 시의 정책적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부모는 안심하고 맡기고 아이는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 1등 도시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